

전남도 16개 출자·출연기관 年 300억 혈세 지원 받고도 250억원 씩 ‘꼬박꼬박’ 적자

광주일보, 16곳 경영 분석

전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매년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300억원 넘게 지원받으면서도 연간 25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5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한 해 이들 기관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자체 수입 비중이 턱없이 낮아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는 이 같은 적자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남도의 유일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박준영 전임 지사 시절 4000억원 가까이 쏟아부은 관광사업장의 적자 규모가 400억원에 육박, 운영을 하면 할수록 채무만 쌓이고 있다. ‘적자 사업장’의 혈값 매각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매각이 지지부진할 경우 결국 전남도의 부담만 커질 전망이다.

광주일보가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16곳(전남개발공사 제외)의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들 기관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214억64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전남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 명목으로 344억6100만원(국비 제외) 지원받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자체수입 규모가 10분의1에 불과한 기형적인 재정구조로 인해 적자만 쌓여가는 것이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2013년 당기순손실이 120억9000만원, 2011년부터 3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331억원이었다. 올해 예산 312억5100만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21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비·도비·시

군비 보조금과 출연금으로 채웠다. 전남테크노파크도 지난 2011년 64억3800만원, 2012년 62억2400만원, 2013년 85억31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자체 수입은 전체 예산(350억6300만원)의 10분의1 수준인 38억6100만원을 예상했다.

지난 2013년 순천의료원(-21억2300만원) 등 8개 기관도 적자로, 16개 기관 가운데 지난 2012년과 2013년 설립된 환경산업진흥원과 전남복지재단을 제외하고 3곳만 적자를 면했다.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무려 3838억6700만원을 투자한 관광사업장 6곳 가운데 5곳이 지난해 3분기까지 374억7100만원의 누적적자를 보였다. 특히 3202억37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여수경도 사업장은 2년간 고작 160억5300만원의 매출을 올려 233억8600만원의 손실이 났다. 영업손실은 67억7600만원으로, 결국 방만한 운영이 손실 규모를 키웠다.

274억7400만원짜리 오동재는 45억8400만원, 110억4700만원짜리 영산사는 31억7700만원, 85억3100만원짜리 땅골호텔은 45억8400만원, 39억4800만원짜리 거북선은 22억8600만원의 빛이 쬐었다. 유일하게 5억4600만원의 이익을 본 골프연습장은 지난해 매각됐다.

전남도는 조만간 이들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논·밭두렁 태우다...산불 많은 나주·신안

산림청 분석, 10년 간 47건

최근 10년간 나주와 신안 등 전국 23곳에서 논두렁 밭두렁이나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산으로 번지는 ‘소각산불’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소각산불 대응을 위해 최근 10년간 산발발생 지역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나주 25건, 신안지역에서 22건의 소각산불이 각각 발생했다. 전국 최다는 경북 안동으로 36건이었다. 이와함께 소각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23개 시군 가운데

화순·나주·영암·구례·고흥·진도·신안·순천·무안 등 전남 9곳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재배작물, 귀농 등 소각 관련 고정적 요인에도 포괄적인 대응으로 소각산불이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빅데이터 분석결과로 나온 전국 23개 시·군을 소각산불 특별 관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산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부 편입 062)605-1114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신학대학원 편입 062)605-1115
원서접수 1. 26(월) ~ 2. 2(월)

존폐위기 물린 5·18기념재단 ▶6면

한·호주 내일 아시안컵 결승 ▶20면

우수도 경칩도 머언 날씨에 ... 흥매 꽃망을 ‘활짝’



광주·전남지역에 눈이 내린 29일, 순천 매곡동 탐매마을 김준선(58)씨 집 마당의 수령 70년된 흥매화 나무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봄이 머지 않았음을 알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토부, KTX 서대전역 경유 ‘수순밟기’

여형구 2차관 광주시 방문 “정부 판단에 협조” 요청

윤장현 시장 “너무 늦었다...원칙 훼손 말아야” 강경

주중 14회·주말 16회 경유 방침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이 29일 광주시를 찾은 방문, 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양해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확정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항공정책을 총괄하는 여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을 방문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호남선 KTX 운행과 관련 30여분간 면담했다. 여 차관은 윤 시장에게 “의견 수렴차 방문했다”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존중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의견수렴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지역민심이나 정치권 모두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장이 조정하고 수순할 단계를 넘어섰다.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또 “운영계획을 이렇게 늦게 지자체에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으며, 여 차관은 “국토부도 코레일이 관련 계획을 제출한 뒤에야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철도망인 KTX 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이 수시로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여 차관의 발언은 ‘책임 회피성’ 답변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 차관은 대전고교로, 대전여고로 나온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의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면서 국토부와 코레일의 호남선 KTX 운행계획이 대전지역 연고주의에 휘둘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 차관이 충남 논산 출신인 탓에 서대전역 경유에 대해 지역 관계자 등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 시 논산역과 계룡역이 추가된다는 점도 미심쩍다.

한편 코레일은 주중 운행 횟수 74회 중 16회, 주말 82회 중 18회씩 서대전역을 경유하기로 했던 것을 각각 2회씩 줄여 운행하겠다는 수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의 서대전역 경유 군하기 행태에 대해 광주시마저 적극적으로 대치하지 않는 분위기가,

그동안 서대전역 경유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광주시는 이날도 강력한 항의를 자제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박남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서대전역 경유 편수를 줄이는 방안이 “코레일이 수정안을 제시했을 것이지만, 시의 입장은 KTX건설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민중 광주시의원도 “광주시 담당 간부가 서대전역 경유 반대 입장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해 당황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KTX개통 대비 종합대책도 내놓았지만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대형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겉핥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 3면>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반발 확산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건설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3개 광역단체장도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을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광주시 의사회와 약사회 등 광주시 의약5단체는 이날 송정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고속철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당초 운행 원칙대로 수정돼야 한다”면서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답게 운영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진 3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푸른광주 21

협의회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고속철도의 건설목적에 역행하는 서대전 경유에 대한 모든 논의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 12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회장 이주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서대전역 경유 논의

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논란과 관련,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시대 흐름을 저해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 지사는 이날 정읍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반대 운동이 열화하고 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결집해 원안대로 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www.dgbfnlife.com

대표전화 1588-4770

파릇파릇 새생명 DGB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이 DGB금융그룹의 가족이 되어 DGB생명으로 힘차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세대와 지역을 넘어 큰 꿈을 펼쳐갈 DGB생명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2015년에는 당신도, DGB생명도 모두가 새싹입니다

DGB DGB금융그룹 DGB생명